

#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

기무라 간(木村 幹)

머리말	VI. 한국 교과서로 보는 ‘근대’의 확대
I. 문제설정과 가설제시	VII.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II.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학	VIII. 일본의 교과서로 보는 ‘내재적 발전’론
III. ‘내재적 발전’론의 등장	IX.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에서의 근대적 법질서
IV.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맺음말을 대신하여
V. 한국 교과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상황변화와 1982년의 ‘교과서 파동’	

## 머리말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직업적 학문 영역이라는 신비 속에 은폐되지 않고 공  
공연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오늘날 저자들의 책임이 갑작스레 증대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民族誌의 텍스트가 재조명되어 주시받게 되자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책임 또한 그 만큼  
무거워질 터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무엇보다도 기존 학계 내에 불안을 양성하고 論敵을  
향해서 사실 자체에 돌아가라 외치면서 힘 대결의 의지까지 드러낸 노골적인 도전장을 보내도  
록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도 모른다.<sup>1)</sup>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가로놓인 이른바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 植民地期에 그 유래  
를 갖는 이 논쟁이 한일 양국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이른바 ‘교과서 문제’<sup>2)</sup>가 애초에 문부과학성이 實敎出版의 세계사 교과서에 대

1) 클리포드 기어즈 著/森泉弘次 譯, 《文化の讀み方/書き方》(岩波書店) 198~199

2) 예를 들어 일본의 신자유주의사관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扶桑社版 교과서에 연  
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교과서의 기술 자체만을 문제삼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해 ‘화북으로의 침략’을 ‘화북으로의 진출’로 ‘수정하게 했다’는 1982년의 ‘오보’사건<sup>3)</sup>으로부터 시작된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필자가 이와 같이 말하는 데에는 그 밖에도 이유가 있다. 먼저 <표 1>을 보자. 이 표는 현재 이른바 ‘過去’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주목되고 있는 사건들이 1945년 이후 朝日新聞에서 얼마의 빈도로 게재되었는가를 5년 단위로 그 기사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일견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한일 양국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분쟁이 1980년대 후반,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4)</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른바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시점에서 과거를 받아들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본래 ‘과거’ 자체는 ‘과거’가 일어난 그 때 그 상태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해나 논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독립변수가 ‘과거’에 있지 않고 각각의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종래 ‘현재’의 입장변화로부터 설명하려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주로 한국사회의 변화로부터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 때 특히 강조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라는 2대에 걸친 ‘권위주의적 체제’<sup>5)</sup>와 1987년의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상황 변화가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그 결과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일본사회의 변화로부터 설명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 현상’과의 관련성을 지적해 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사인식’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의 망

3) 다만 당시 검정에는 강제력이 있는 A의견과 강제력이 없는 B의견이 있었는데, ‘침략’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B의견이 이전부터 제출되어 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이 점에 대해서는 즐고, 2008 <ポピュリズムの中の歴史認識：日韓の事例を中心に> 《レブァイアサン》 2008년 봄호 ; 同, 2007 <日韓關係における‘歴史の再發見’に關する一考察> 《國際協力論集》 15(1). 또한 鄭奈美·木村幹, 2008 <‘歴史認識’問題と第一次日韓歴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 《國際協力論集》 16(1) ; 2008, 16(2) 등도 참고할 것.

5) ‘권위주의적 체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즐저, 2003 《韓國における‘權威主義的’体制の成立》 (ミネルヴァ書房)을 참고할 것.

령'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역사인식'을 둘러싼 상황도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그렇지만 양자는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민주화를 통한 설명은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의 일부 - 교과서문제나 독도/다케시마 문제, 또한 전두환 정권에 의한 '60억달러 청구 문제' -가 전두환 정권의 전성기에 제기되었음을 해명할 수 없다. 또한 민주화만으로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가 오늘날에도 매년 활발해지고 있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일본사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표 2>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1980년대는 일본의 교과서에서 한반도에 관한 기술이 오히려 급속히 충실해지던 시기이다. 바꾸어 말하면 1970년대와 그 이전의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병합을 비롯하여 한일 간의 '과거' 사실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한일 간에 교과서문제가 표면화된 적은 한 번도 없다.<sup>6)</sup> 이를 보면 1980년대 말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분쟁을 일본의 '우경화'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0년대 말 이후 한일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금일의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쓰여진 작성된 학술적 분석이다.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한일 양국 교과서의 '근대'에 관한 서술방식의 차이와 그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한일 양국의 교과서, 그 중에서도 '근대'에 관한 기술을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 I. 문제설정과 가설제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의 활발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과거'가 '과거'로서 일단 확정된 뒤에는 더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면, '과거'를 둘러싼 논의의 변화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으로부터 설명할 수밖에

6) 가령 신자유주의사관의 대두 등을 일본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본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논의하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상이한 집단 사이에서 열렬히 논의된다. 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곧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집단 간의 이해의 차이이다. 가령 특정의 문제가 상이한 집단 사이에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양자의 이해가 동일하다면 양 집단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할 여지는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계를 정리한다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라는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자의 관점에서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몇 번인가 논의한 적이 있다. 그 주된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곧 ‘과거’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포인트는 논쟁 상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전반 이전까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저하된다. 달리 말하자면 197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의 ‘과거’를 둘러싼 문제의 중요성은 ‘현재’ 일본의 중요성으로 인해 크게 제약받는 양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일본의 중요성이 저하되자 한국에서는 ‘과거’를 둘러싼 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또 반일적인 여론이 분출된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냉전의 종언과 글로벌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일 상호간의 특수성을 상대화시켰다. 이와 같이 ‘현재’의 중요성이 미약해지면서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부상하기 쉬워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sup>7)</sup>

그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양국에서 일찍이 논의되기 어려웠던 문제를 언제부터인가 용의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거’를 둘러싼 논의의 장에 변화를 야기한 또 하나의 요인은 다름아닌 세대교체였다. 일본의 ‘BC급 전범’이나 한국의 ‘친일파’를 둘러싼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이전에는 ‘과거’에 대한 논의가 그때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논의를 의미하였고,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7) 이 논의에 대해서는 拙稿, 2008 <ポピュリズムの中の歴史認識> 및 同, 2007 <‘Nationalistic Populism in Democratic Countries of East Asia’, Journal of Korean Politics> 《韓國政治研究》 Vol.16 No.2를 참고할 것.

터부가 존재했다. 터부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논의보다는 침묵으로 내몰았고,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실들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망각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일 양국에서 ‘과거’에 관한 ‘역사의 재발견’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그 전형은 이른바 ‘중군위안부’를 둘러싼 혼란일 것이다. 본래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한국에서 동일시했던 사실은 1980년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총력전 시기의 상황이 말 그대로 불명료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8)</sup>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域內生産에 성장이 있었다’는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이 식민지기 조선에도 있었다는 점은 이전에는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일부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이 흡사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매우 특별한 무언가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sup>9)</sup>

터부가 ‘과거’의 일정의 ‘사실’들을 덮어버림으로써 이후에 시작된 ‘역사의 재발견’은 추문을 일으키듯이 전개되었다. ‘과거’는 잊혀짐에 의해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 독자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기존 연구는 어느 것이든 ‘과거’ 문제가 어찌서 1980년대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쉽게 논의되었는가를 제시했을 뿐이다. 물론 식민지 지배를 행한 일본과 그 지배를 당한 한국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의 ‘과거’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의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가설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즉 한일 양국간에 ‘역사인식’을 둘러싼 현저한 대립이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시기 양국의 역사관, 특히 ‘근대’에 대한 역사관의 분기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매우 상이한 ‘근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페리 내항 이후 메이지유신을 거쳐 ‘위로부터의 근대화’에 성공하고 청일·러일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열강의 일원으로 부상해 갔다. 이에 반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서양 제국에 대한 개국이 늦었던 한국의 경우 비록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8)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대연구소편(許善子·金英姬 역), 2002 《よくわかる韓國の‘慰安婦’問題》(Advantage Server) 등.

9) 전형적인 예로는 山野車輪, 2005 《マンガ嫌韓流》(晋遊舎)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근대’에 대한 인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그것이 1980년대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II.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학<sup>10)</sup>

우선 한국에서의 역사연구 상황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해 보자. 첫 번째 단계는 일본 식민지기에 주로 일본인 학자에 의해 한반도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들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의 일원으로서 혹은 경성제국대학의 일원으로서 한국근대사를 ‘동시대사’로 취급하였다. 이들은 그 지위상 총독부 등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자료에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진,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의 ‘인사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sup>11)</sup>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 ‘제1세대’는 해방 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한국 근대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에 치우쳐 한민족의 ‘事大性’을 강조한데 대한 반발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47년 한국의 어느 논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朝變夕化의 아첨하는 事大性을 보아서는 失望할 程度이지마는 한편으로 長點을 찾아보면 世界優秀民族이다. 歷史的으로 飛行機 潛航艇 活字의 發明이 世界에 앞섰다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倭政時代에 모든 拘束 中에서 手足의 움직이는 自由가 있으며 올림픽選手 孫基禎과 世界舞姬 崔承姬가 나지 않았는가.<sup>12)</sup>

이 배경에는 민족해방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대두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의 주장이 곧 한국 근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10) 한국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回顧와 展望> 《歷史學報》 5 ; 역사학회 編, 1982 《현대 한국 역사학의 동향(1945~1980)》 (一潮閣) ; 同 編, 1969 《한국사의 반성》 (新丘文化社) ; 한국사 연구회편, 1985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申澐植, 1999 《한국사학사》 (三英社) 등을 참고했다.

11) 이 세대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최갑수, 2002 <민석홍의 학문세계> 《프랑스사 연구》 6

12) 崔成煥, 1947 <국민운동의 이념> 《建設》 6월호, 16

들어 宋仁榮은 1948년의 <우리 민족사의 성격>에서 변함없이 일본통치기 연구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5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들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들 사이에 낀 한반도의 특수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지리적 취약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근대사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모순이 존재했던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소위 ‘식민지사관’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연구-주로 ‘실학’이 그 대상이 되었다-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근대사의 타율성에 대한 주장 또한 계속되었다.

이러한 당시 한국학계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당시 한국 역사학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대 경의 한국의 역사학계를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 부류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제1세대는 1920년대 이전에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고 또 그 곳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崔南善<sup>14)</sup>, 李丙燾<sup>15)</sup>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에 교과서 집필을 담당한 것은 말하자면 역사학계의 원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제2세대는 제2차 조선 교육령 이후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열린 결과로써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대표적 인물로는 1945년부터 1962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金庠基<sup>16)</sup>나 申奭鎬<sup>17)</sup>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에 한국 역사학계의 중심에서 실제로 활약한 인물들은 이 세대들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역사학회가 발족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그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韓祐勗<sup>18)</sup>·金哲揆<sup>19)</sup>·千寬宇<sup>20)</sup>·全海宗·高柄翊<sup>21)</sup>·鄭秉學·閔錫泓<sup>22)</sup>·

13) 李基白, 1971 <植民主義의 韓國史觀 批判> 《民族과 歷史》(一潮閣) 33. 원문은 《國史新論》(1961)의 緒論.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北進統一’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존재했다(金龍德, 1953 <國史의 基本性格> 《思想界》 11월호).

14) 최남선과 역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英華, 2003 《崔南善의 歷史學》(景仁文化社). 또한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5) 斗溪李丙燾博士華甲記念事業委員會 編, 1956 <斗溪李丙燾博士略歷>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一潮閣). 또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6) <엠포스 한국학>(http://koreandb.kdaq.empass.com/history/people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7) <친일파 99인>(http://bluecabincom.ne.kr/split99/ssh.ht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8) 1915년생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연장자이다. http://preview.britannica.co.kr(최종확인 2009년 2월 3일);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대표인물>(http://www.lawmarket.co.kr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19) <Daum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20)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대표인물>

安貞模·李普珩<sup>23)</sup> 등이었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에 일본 유학을 경험했으나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했다가 해방 후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다시 학업을 연마한 세대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에서도 한우근과 고병익은 東京帝國大學 중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천관우는 京城帝國大學, 민석홍도 京都帝國大學을 중퇴하고 후에 서울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해중은 이들의 서울대학 동기생이다. 그 외에도 김철준은 1943년에 京都의 東寺中學校를 졸업한 뒤 1944년 할 수 없이 한반도로 돌아왔다. 이보형도 1924년생으로 서울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들 초창기 학회 발기인들은 1957년까지 상임 간사직을 독점하였다. 그 후 1959년에 李基白,<sup>24)</sup> 吉玄謨, 尹武炳가 상임 간사로 임명되었으며, 1960년에 李光麟<sup>25)</sup>이 추인되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한국 역사학회의 사실상의 창설 멤버들은 1925년생으로, 1971년에 대표간사에 취임한 이우성을 제외하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초대 회장인 洪以燮의 퇴임 이후 회장직을 독점하였다. 이들 중 이광린은 1926년생으로 해방 후 연세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이기백<sup>26)</sup>은 1924년생으로 早稻田大學에 입학했다가 1947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양사를 전공한 1923년생 길현모도 민석홍 등과 함께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이이다. 윤무병도 1924년생이며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다.

이를 볼 때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학 연구에 하나의 명확한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역사학 연구가 일본통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최후의 세대 - 보다 정확히는 일본에서 학문을 지향했으나 총력전 하에서 이를 중단했다가 경성제국 대학에서 해방 후 개편된 서울대학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 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점이다.

(<http://www.lawmarket.co.kr>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 《韓國日報(온라인판)》 2004년 10월 6일자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21) 《韓國日報(온라인판)》 2004년 5월 19일자 ;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22) 文化日報(온라인판), 2001년 7월 23일자; 최갑수, 2002 <민석홍의 학문세계> 《프랑스사연구》 6

23) 이보형, 1976 《미국사개설》 (일조각)

24) 李基白, 1961 《國史新論》 (一潮閣).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인물>(<http://www.lawmarket.co.kr>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25) 《韓國日報(온라인판)》 2006년 4월 11일자

26) 어느 논자는 이기백과 이병도의 밀접한 관계를 들고 있다. 송준희, <규원사화는 위서인가?> (<http://www.baedalgu.com/bbs>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이것은 생각해 보면 기묘한 일이었다. 천관우와 민석홍이 모두 1925년생인 사실에도 나타나듯이 이 때 그들 대부분은 당시 아직 30세도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절대적인 인재부족 문제가 있었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일본통치기에 조선총독부의 말단에서 연구에 종사하였고, 또 같은 시기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일본의 통치정책은 朝鮮人 朝鮮史家를 양성하는 방침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일본의 통치가 종식된 후에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크게 넘어 연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정식으로 발족된 한국 역사학회의 회장에는 홍이섭<sup>28)</sup>이 취임하였다. 홍이섭은 1914년생으로 1938년에 延禧專門學校를 졸업했으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에서의 근대적 역사연구 제2세대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통치기에는 서울기독교청년회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제2세대의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방 후에는 그 전년에 일본어로 쓴 《朝鮮科學史》가 일본 당국의 ‘식민사관’에 명확한 반기를 든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그는 말하자면 ‘민족사관’의 중심적 인물이 되어 갔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이섭을 회장으로 추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일본의 조선사학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자.

### Ⅲ. ‘내재적 발전’론의 등장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의 한반도 연구는 확연한 쇠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었다. 이 점에 대해 하타다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보자.

朝鮮이라는 말이 朝鮮人에게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느낌을 주던 시기에는 朝鮮史를 연구할 의욕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동시에 젊은 일본인에 대해서도 조선사연구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 조선사연구를 저해한 요인은 정치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문의 내용 그

27) 旗田巍, 1951 《朝鮮史》(岩波書店) 4

28) 원유환, 1999 <홍이섭 선생의 삶과 역사학> 《實學思想研究》; <야후! 백과사전>(http://kr.dic.yahoo.com 최종확인 2008년 12월 22일)

자체에도 있었다. 일본인의 조선사연구는 고대사 연구에 집중되어 근대사 연구는 부족했다. 게다가 그 고대사연구는 문헌비판·연대기·지명고증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 (중략) 그것은 역사학의 중요한 전제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커버할 수 없다. 인간이 없는 역사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패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지배가 소멸되었고, 조선사연구자는 국가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선연구는 단순해 침체되고 말았다.<sup>29)</sup>

그리고 하타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조선사연구는 새로운 재출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래의 성과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를 뛰어넘어 새로운 조선사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조선인이 걸어 온 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고난의 鐵火 속에 휘말려 들어간 조선인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삼는 것이 조선사연구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0)</sup>

이러한 일본에서의 조선사연구 상황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 중반이 전환점이 되는 이유로서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sup>31)</sup> 하나는 1965년 한일조약 체결과 그 후 한일 양국의 정치적 유착이 일본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민족자결의 고양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한국의 민주화투쟁을 “일본의 평화나 민주주의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생각하는 일본인”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나카츠카에 의하면 이것이 “일본에서 조선사연구가 성행하게 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 되었다.<sup>32)</sup>

한반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변화는 연구형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 왔다. 즉 “조선은 단지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침략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조선사를 분석하는 연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바로 ‘내재적 발전론’의 등장이다.

나카츠카는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에 기초한 분석이 이 시기부터 “조선에서는 물론 일

29) 旗田巍, 1951 《朝鮮史》(岩波書店) 4

30) 旗田巍, 《위 책》 5

31) 中塚明, 1981 <‘內在的發展論’と帝國主義研究> 朝鮮史研究會 編, 《新朝鮮史入門》(龍溪書舍) 263

32) 이러한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등장한 것이 旗田巍 編, 1965 《アジア・アフリカ講座 日本と朝鮮 第3卷》(勁草書房)이다. 여기에는 조선사의 움직임을 당시의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과 연결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본에서도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sup>33)</sup> 이와 같은 이해의 배경에는 당시 일본인이 북한의 연구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다시 나카츠카의 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61년경부터 학계 전체의 관심이 한국근대사에서의 자본주의 맹아 문제에 쏟아졌으며, 이는 1963년 9월 《로동신문》에 게재된 金錫享 등의 <소련아카데미 편 《世界史》의 조선관계 서술에서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나카츠카는 이 논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조선사의 내재적·자주적 발전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의 조선사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sup>34)</sup>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시기 일본에서의 한반도연구에 있어서 한일조약 체결과 북한에서의 연구 상황 전개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같은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식민지사관의 극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sup>35)</sup> 예를 들어 1963년 한국 역사학회 대회에서 ‘근세후기’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천관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國史學에서 朝鮮後期는 가장 未開拓의 分野이다. 우리는 近代社會라면 大院君以後를, 封建社會라면 高麗나 그 훨씬 전부터를 생각하게 될 뿐이 아니라, 朝鮮王朝를 對象으로 한 다해도 그 前期의 研究가 비교적 豊富한데 比하여 後期까지는 研究가 내려 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朝鮮朝를 通觀하는 研究에서도 대개는 前期의 部分은 基本史料로 다루고 거기에 계속 되는 後期의 研究는 二次以下の 史料로 大略을 덧붙이는 정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朝鮮後期는 國史의 展開上 가장 중요한 研究對象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數千年 累積된 「舊來」의 社會가 脫皮를 앞둔 그 前後의 段階인 만큼, 또 近代化過程을 살피기 위한 直接의 背景이 되는 段階인 만큼, 當時의 社會, 當時의 文化에는 近代로의 짝이 있었는가, 짝이 없었다면 그 素地라도 있었는가, 前近代의인 體制는 崩壞하고 있었는가, 도리혀 그것이 強化되고 있었는가 … 問題될 點은 許多하다.<sup>36)</sup>

“문제는 허다하다.” 주목할 것은 이 말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천관우의 ‘내재적 발전론’에 관한 연사에서 일종의 ‘주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에 한일 양국 간에 하나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그 배경을 달리하면서도 한일 학계는 모두 근대사연구의 재조명을 향

33) 中塚明, <앞 논문> 263

34) 中塚明, <앞 논문> 264

35) 한국에서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말은 주로 金容燮의 농업경제연구가 발표된 이래 ‘자본주의 맹아’의 한 형태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실학이나 농민운동 등 그 외 조선반도 내부에서의 ‘내재적’ 움직임 전체를 ‘내재적 발전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36) 千寬宇, 1963 <回顧와 展望> 《歷史學報》 20, 127

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 도정은 중간에서 갈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 IV.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다시 한국의 학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일본통치 말기에 고등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우근이나 천관우, 그리고 이들에 앞선 홍이섭의 일련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그들은 당시에 말하는 ‘근대’ 혹은 ‘조선후기’ 연구에 힘을 쏟으면서 한국의 전근대사에 근대의 맹아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특히 이 때 중시된 것은 ‘실학’ 연구였는데, 이들은 조선후기에 존재한 ‘실학’ 전통이 근대의 ‘개화파’로 연결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는 금일 한국에서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일례로 1975년에 출판된 홍이섭의 《한국근대의 성격》<sup>37)</sup>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이섭은 ‘한국근대사’를 대원군정권 직전인 임술민란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대원군정권기 이전의 조선왕조가 ‘봉건사회’이며, 이러한 ‘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야말로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홍이섭은 대원군정권기 이전 상황을 비판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내적으로 봉건제의 정치 구조에 금이 가게 한 사회적인 광범한 운동은 1862년(철종 3년 壬戌)의 淸州民亂에서 불뿔이 튀자, 전국적인 규모로 퍼져갔던 농민들의 항거에서부터일 것이다. 이 농민들의 움직임은 19세기 후반기를 그대로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래도 이 취약한 지반에 건디어 온 그 자체가 한국 근대화의 不進性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에서 한국의 근대화는 외래적인 자본주의의 힘에 휩쓸렸고, 이 과도기에 있어 한국의 자체적인 근대화를 기도한 몇 사람의 파이오니어는 곧 한국 근대사상에 있어 새로운 인간상이었지만 그 구성 조건이 복합적이었음은 잊을 수 없다.<sup>38)</sup>

37) 참고로 홍이섭은 1974년에 서거했으며本書는 그 유고에 기초하여 한국일보사가 출판한 것이다.

洪以燮, 1975 《韓國近代史의 性格》 (한국일보사) 중 <편집자의 지> 참고.

38) 洪以燮, 《위 책》 8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후 한국근대사에서 ‘근대의 맹아’의 중요 부분으로 주목받게 되는 농민반란이 어중간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농민반란은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요소인 동시에, 또한 그에 의해 국가를 약체화시키고 근대화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간주되었다. 둘째는 일부 ‘개척자’, 곧 실학으로부터 개화파로 연결되는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또 그것이 얼마나 취약했단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역사학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한우근에게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는 1961년 초판인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李朝後期の 社會와 思想에 關한 徹底한 研究는 오늘날 韓國의 現實과 關聯하여 생각하여서 도 國史學徒의 焦眉의 急務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韓國이 하루바삐 近代社會로 轉換·發展되어야 할 時期에 있어서 도대체 어떠한 歷史的·社會的 條件이 우리나라의 社會發展을 阻害하여 왔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우리는 明確하고도 올바른 解答을 얻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封建的인 遺制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인가, 또는 어찌하여 市民階層의 새로운 勢力이 제대로 成長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等等의 問題, 換言하면 우리나라 社會의 停滯性 乃至는 後進性의 問題는 李朝後期社會에 對한 徹底한 研究가 없이는 그 解明의 길이 없을 것이다.<sup>39)</sup>

분명한 것은 해방 후 한국사연구를 이끌어간 이 세대가 근대사연구에 임하면서 ‘근대의 맹아’ 이상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한국근대사에 대한 이해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박정희의 역사관과도 일치하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논문 <우리 민족의 과거를 반성하다>에서 조선왕조 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李朝後期에 들어 근대화의 주체가 된 상공업자, 제3계급적인 평민층이 ①전통적 신분제에 집착하고, ②관료제의 강력한 잔재로 인해 민간상공업에 대한 의욕이 적었던 사실에 더하여, ③常民과 賤民을 중산계급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내산업, 과학기술, 경영 등이 미숙 내지 전무했으며, ④더욱이 태동하고 있던 관료적 자본주의도 강력한 외국식민지경제의 침략 앞에 수포로 돌아가, 결국에는 건전한 대두, 성장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sup>40)</sup>

이렇게 한국에서의 근대사연구는 하나의 모순에 직면하게 될 실학이나 ‘자본주의 맹

39) 韓沽勳, 1983 《李朝後期の 社會와 思想》 (을유문화사) 2

40) 朴正熙, 1970 <わが民族の過去を反省する> 《朴正熙選集 I》 (鹿島研究所出版會) 64

아’에 관한 연구, 즉 한국의 ‘내재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내재적 발전’을 저해한 요인에도 착목하여 ‘내재적 발전’의 맹아가 맹아의 단계에 그치고 근대화의 단계까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들의 연구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용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1960년대부터 70년대의 한국에는 심각한 빈곤과 종속이 엄연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 속에서 이들이 지나치게 ‘장미빛 과거’를 그려낼 수 없음을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점차 변화해 갔다. 여기에서 지적해 둘 것은 근대사연구자의 세대교체와 연구량의 증가이다. 사실 1979년에 출판된 《歷史學報》제84호에서 金敬泰는 이 시기에 “연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제기와 연구대상의 확대 등의 착실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sup>41)</sup> 여기에서 김경태는 그 ‘진전’의 대표저작으로 慎鏞廈의 《독립협회연구》를 언급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용하는 이 저작에서 독립협회를 “기존의 정부제도·관료제도·교육제도·산업제도·사회관습과 가치관 등의 근본적 구조변혁을 주장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독립협회의 社會思想 중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近代化思想은 體制外部로부터의 列強의 壓力이 너무 크지만 않았더라면 韓國人들이 自主的으로 近代化를 達成하여 그들의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諸目標을 實現시킬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sup>42)</sup>

이러한 한국 역사학계의 세대교체와 연구량의 증대는 1984년경에 보다 명확한 형태로 나타났다. 1984년에 발행된 《歷史學報》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면서 1979년부터 1983년의 새로운 저작들을 열거한 후 그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집필된 박사논문이란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그 때까지 한국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이들 중의 한 사람인 이기백은 새로운 세대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우리 韓國史學은 近代史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民族的인 수난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41) 金敬泰, 1979 <回顧와 展望> 《歷史學報》 84, 82~83. 단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慎鏞廈의 저작에 대해 김경태는 “연구대상에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同, 83).

42) 慎鏞廈, 1993 《獨立協會研究》 (一潮閣) 667

편인가 하면 志士的 기풍이 강하고 반면에 實證的인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科學的인 성격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중략)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名利를 위하여 眞理조차도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듯한 인상조차 받는다.<sup>43)</sup>

그렇지만 이러한 ‘구세대’의 비판<sup>44)</sup>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사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하나의 징표가 ‘근대’기점의 변화, 보다 정확히는 해체였다. 일례로 《歷史學報》는 1979년까지 <회고와 전망>에서 ‘근대’라는 항목을 두었다. 그러나 이 항목이 1984년에는 ‘최근세’라고 수정되었다. 이는 ‘민족사관’과 ‘식민주의사관’의 대립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이기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近代民族主義史學에 대한 높은 관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民族史觀이란 용어는 그 개념이 극히 모호한 것이어서 학문적으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民族史觀이란 말은 植民主義史觀과 대립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善概念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民族史觀은 韓國民族史觀과 같은 뜻의 말일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韓國史를 王朝를 중심으로 고찰한 王朝史觀에 대하여 民族을 중심으로 보아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45)</sup>

결국 ‘구세대’의 대표자로서 이기백이 비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최근 ‘신세대’에 의해 ‘새로운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때때로 연구대상에 대한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그 배경에 존재하는 강한 가치관이 눈에 띄며,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료실증주의적이어서 할 역사연구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근대’란 무엇이며 어떻게 논증해야 하는가. 한국의 역사학은 하나의 교차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근대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저작으로 1984년에 초판이 출간된 姜萬吉의 《한국근대사》를 들 수 있다. 강만길은 이 저작의 목적을 서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둘째, 사실을 충실히 서술한 역사책보다 사실을 해석하는 노력이 더 담긴 역사서를 만들려

43) 李基白, 1984 <回顧와 展望(總說)> 《歷史學報》 104, 142~143

44) 역시 대표적 ‘구세대’ 연구자인 이원순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李元淳, 1976 <서평: 신용하(著) 독립협회연구> 《韓國學報》 212

45) 李基白, <앞 논문> 137

했다. 이런 경우 역사학이 기피하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그 ‘주관성’이 역사를 보는 눈의, 그 나름의 특징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랐다.<sup>46)</sup>

그렇다면 강만길은 어떠한 ‘주관성’에 근거하여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는 <일본어판에 부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문호개방 이전의 조선사회의 정치·경제·사회·사상면의 변화와 발전이 19세기 후반기에 들이닥친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범칙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구명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는 그것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특히 일본 독자들의 문호개방 이전의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sup>47)</sup>

。 。 。

이렇게 하여 놀랍게도 강만길은 자신의 한국근대사를 종래 조선왕조 후기라 하던 17세기까지 확대하였다. 강만길은 1933년, 신용하는 1937년생이다. 바로 이기백이 비판한 1979년 전후에 30대에서 40대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종전의 한국사연구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결국 무너진 것은 두 가지였다. 신용하는 그때까지 한국근대사연구의 커다란 벽이던 한국근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무너뜨렸다. 이후 한국에서는 “만약 열강에 의한 침략이 없었더라면” 한국에서도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

한편 강만길이 무너뜨린 것은 그 때까지의 ‘근대’의 틀 자체였다. ‘구세대’는 근대란 궁극적으로 웨스턴 임팩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그 이전의 것은 ‘맹아’나 ‘전제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만길은 이제 이전에는 ‘맹아’나 ‘전제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되던 것 그 자체가 ‘근대’라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사에서 ‘근대’의 틀은 크게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던 것일까.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46) 姜萬吉 著, 小川晴久 譯, 1986 《朝鮮近代史》(高麗書林) 2

47) 姜萬吉 著, 小川晴久 譯, 《위 책》 4

## V. 한국 교과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상황 변화와 1982년의 ‘교과서 파동’

제4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민족사관’적 역사관의 대두는 그 때까지 한국 역사학회를 지지해 온 중진연구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진연구자들의 영향력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움직임을 통해 실추되어 갔다.

첫 번째는 이 시기 대두하고 있던 젊은 연구자들의 움직임과 압력에 의해서이다. 그 활동의 중심에 선 것이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강만길이다. 강만길은 이미 1976년의 단계부터 <평론: 국사학의 현재성 부재문제>라는 평론을 집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세기에 가까운 우리 나라 近代史學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특히 그것의 現在性不在가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또 반성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한 시대 한 민족의 역사학이 그 민족이 處해 있는 現在的 要求와 그다지 연관성 없는 지난날의 사실만을 研究對象으로 삼고 現在와 가까운 시기에 대한 研究와 評價 批判을 기피한다면 학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48)</sup>

위 문장에서 명백한 것은 그들에 의한 ‘민족사관’적 역사연구가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점일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생각에서 강만길은 한국의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고언을 하게 된다. 같은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實證史學의 경우 역사학계는 연구 활동에만 종사하고 역사 교육은 政策當局에게 일임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길만이 연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sup>49)</sup>

주목할 것은 강만길이 이와 같은 한국 역사학계의 상황을 일본 통치시대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통치시대에는 조선인 연구자들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어느 새인가 한국의 역사학계에는 연구와 교육을 분

48) 姜萬吉, 1976 <評論: 國史學의 現在性 不在問題> 《韓國學報》 132~133

49) 姜萬吉, <위 논문> 141

리하여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강만길은 일본통치기의 문제를 끌어들이고 그 잔재를 끌고 가려하는 당시의 역사학계와 박정희 정권 말기의 교육행정에 대해 비판을 전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역사교육의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위의 강만길의 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당시의 ‘민족사관’론자들 대부분은 이후의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진보’진영 계열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정권까지 ‘보수’세력이 정권의 주류를 점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그들만의 운동으로는 정권 내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당시 한국에서의 교과서논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들 ‘진보’세력의 비판과 동시에 진행된 ‘보수’세력 내부로부터의 비판,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승만 정권기에 초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安浩相 등과 같은 재야 보수계열 역사학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일련의 움직임이 개시된 것이 묘하게도 앞서의 강만길의 평론이 발표된 1976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 해부터 자신들이 발행하는 잡지를 기반으로 기존의 한국사연구자들을 ‘식민지주의사관론자’이자 ‘민족반역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표적이 된 것이 이병도와 신석호였다. 안호상 등은 이들이 일본통치기에 朝鮮史編修會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이들에 의해 형성된 당시 역사학회의 주요인맥을 이 ‘친일파’들의 뒤를 잇는 자들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sup>51)</sup>

이러한 안호상 등의 움직임은 1978년 국사교과서의 내용시정을 요구하는 建議書의 형태로 나타났다. 건의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로부터 안호상 등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정치적 요망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당시 안호상 등의 국사교과서 개선요구는 주로 고대사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이들은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을 통해 기존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 혹은 수정을 제안하였다.<sup>52)</sup>

5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 논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해안); 同, 1995 <국사교과서파동(상)> 《實學思想研究》 5·6합집; 同, 1996 <국사교과서 파동(하)> 《實學思想研究》 7. 또 坂井俊樹, 2003 《現代韓國における歴史教育の成立と葛藤》(御茶の水書房)이 상세하다.

51) 윤종영, 1995, <위 논문> 368

52) 위와 같음

1. 古朝鮮의 疆土가 동북역은 바다요, 북역은 黑龍江이며 서남역은 현재의 北京까지이다.
2. [현행 교과서에는]檀君王 시대의 1200년 歷史를 削除하였다.
3. [현행 교과서에는]檀君을 神話로 돌려 否定하고 있다.
4. [현행 교과서에는]燕나라 사람 衛滿을 古朝鮮의 創建祖로 삼았다.
5. 衛滿朝鮮의 서울인 王儉城은 中國의 山海關 부근에 있었다.
6. 樂浪은 中國의 北京 지방에 있었다.
7. 百濟는 약 400여 년 간 中國의 중남부를 통치하였다.
8. 新羅統一 後 68년간의 疆土가 吉林에서 北京까지였다.

일견 본고의 ‘내재적 발전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고대사에 관한 그들의 요구는 실제로는 고대사 분야만이 아니라 근대사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의 ‘제안’은 이제까지 한국 역사학회를 이끌어 온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의표명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던 한국 역사학계의 중진들은 새로운 대응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제안’이 역사학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신중한 자료비판과 실증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山海經》이나 《滿洲源流考》 등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여 그 때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무시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주장이 본고가 이제까지 주목해 온 민중사관이나 ‘진보’적 학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인가 하면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한 민간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 때까지 한국의 역사학회에서 중추를 차지해 온 사람들이 ‘진보’적 진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이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때까지 한국의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국정 교과서의 집필이나 편수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안호상 등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 관점에서 격렬하게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불행하게도, 1980년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즈음 안호상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요구로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었다.

즉 1980년 한국 문교부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여 국사교과서 개발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호상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할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

안호상 등은 모든 방면에 압력을 가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실제의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 청원은 새로운 여당인 民主正義黨의 유력의원 권

正達 등 18명의 지지를 받아 이들의 공동제의 형태로 <국사교과서 내용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의 文教廣報委員會에 정식 제출되었다. 이 청원에서는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과서가 일본통치기 식민사관의 색채를 짙게 띠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를 곧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11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된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선학들이 밝혀 온 바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 논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sup>53)</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여 그 때까지 한국의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게 실추되어 갔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앞서 서술한 1978년과 1982년의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내용에 변화가 생긴 한 원인이 여기에 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교과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VI. 한국 교과서로 보는 ‘근대’의 확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논쟁이 활발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시기부터 1990년경까지의 교과서의 변화에 대해 고등학교 《國史》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79년의 교과서에서 분명한 것은 이 교과서가 근대의 시작을 대원군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과서에는 5개의 장이 있는데, 각각 제 1장은 ‘고대사회’, 제 2장은 ‘고려사회’, 제 3장은 ‘조선사회’, 제 4장은 ‘근대사회’, 제 5장은 ‘현대사회’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근대사회’의 ‘단원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실학의 발전이 근대 문화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선 사회는 개혁을 맞았다. 이로부터 제국주의 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마침내 청·일과 러·일 간의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로 대한 제국이 붕괴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를 넘기면서 민족적 각성은 개화, 자강과 자주, 혁신의 근대 의식을 고조시키고 민족주의를 정립시켜 20세기 초의 항일 운동의 사상적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 독립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sup>54)</sup>

53) 자세한 내용은 각주 50에 제시된 각 문헌을 참조할 것.

54) 교육부, 1981 《고등학교 국사》 223

여기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실학의 발전이 근대문화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을 글머리에서 언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의 맹아로서의 실학은 존재했지만 그것을 근대로까지 살려내지는 못했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민족적 각성’이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민족주의가 이 시점에는 아직 명확한 형태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근대’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계층 분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신분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양반 문벌의 정치적 지배권이 강력한 상황 속에서의 신분 이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사회적 진통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sup>55)</sup>

그리고 이 교과서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과제’ 중 하나로 “조선후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항목을 두었다.<sup>56)</sup> 결국 이 교과서는 대원군정권 이전과 이후의 단절을 강조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82년의 교과서에서 다시 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처음으로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 발행된 이 교과서에서 주목할 점은 그 때까지 왕조명이 붙여졌던 각 장의 명칭이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이다. 상권의 각 장은 제 1장 ‘고대사회의 발전’, 제 2장 ‘중세사회의 발전’, 마찬가지로 하권의 각 장은 제 3장 ‘근대사회의 태동’, 제 4장 ‘근대사회의 성장’, 제 5장 ‘현대사회의 발달’로 각각 수정되었다. 각 장의 표제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발전’이 강조되었으며, 우리는 그로부터 내재적 발전론의 강한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후기를 다룬 부분에서 ‘근대’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조선후기와 개항 이후의 연속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실제로 제 3장 제 1절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대외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내재적 발전’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국가적 노력과 사회 변화가 연결되어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농업에 있어서는 새로

55) 교육부, 1981 《위 책》 175

56) 교육부, 1981 《위 책》 175

운 영농 기술이 개발되고, 상공업에 있어서도 전기와 달리 자유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대 사회로의 내재적 성장을 의미한다.<sup>57)</sup>

그렇지만 이 교과서에는 모순이 존재했다. 그것은 1979년판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조선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앞서 인용한 1979년판 교과서 제4장의 ‘개요’를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제4장 제1절 ‘민족의 각성과 근대문화의 수용’은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홍선 대원군이 몰려나고 조선은 개항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 사회로부터 새로운 근대적 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개항을 전후하여 동학 사상, 개화 사상, 위정척사 사상이 자라났고, 이들 사상이 서로 얽히면서 정계는 혼미해져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의 세력이 무력을 배경으로 침략의 야심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sup>58)</sup>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열강 그 중에서도 일본에게 침략당한 사실을 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하나의 모순이 존재하였다. 한국에 내재적 발전의 요소가 충분히 존재했다면 한국도 일본 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근대화를 이루어 외적의 배제에 성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재적 발전을 강조한 1982년의 교과서는 조선후기 부분과 개항 이후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서 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1982년판 교과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다가 1990년에 개정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국사》교과서는 상하 두 권으로 장의 구성이 분리되어, 하권은 제 1장 ‘근대사회의 태동’, 제 2장 ‘근대사회의 발전’, 제 3장 ‘민족의 독립운동’, 제 4장 ‘현대사회의 전개’로 이루어졌는데, 일본통치기의 민족운동이 새로운 장으로 분리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이 교과서에 대해 우선 주목할 것은 제 1장 제 1절에 ‘근대사회의 지향’이라는 새로운 절을 구성하여 ‘근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길지만 흥미로운 부분이므로 그대로 인용해 보자.

농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그들의 역량이 증대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57) 교육부, 1983 《고등학교 국사(하)》 3

58) 교육부, 1983 《위 책》 60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맹아로서,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었다.

근대 사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전제되는 민주 정치가 구현된 사회를 말한다. 참된 민주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민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 각 계층이 평등한 사회를 뜻한다. 평등 사회의 출현은 지난날의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고 피지배층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사회는 세습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가 거부되고, 사상과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을 뜻한다. 즉, 산업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자유로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전문적 경영 방식에 의해 생산력의 증대가 추구되는 사회를 말한다.

사상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합리화의 추구를 뜻한다. 즉, 절대적 가치 체계에 의한 불합리한 구질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적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와 같이 근대 사회에서는 민주화, 산업화, 합리화, 과학화 등이 추구된다.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sup>59)</sup>

그렇다면 1990년판 교과서는 조선후기와 개항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고자 했을까. 제2장 ‘개요’에서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 사회는, 안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근대적인 요소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제국주의 열강에 개항을 하였다. 이로부터 열강의 침략이 잇달았으며,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도발한 일제에 의하여 대한 제국은 붕괴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위정척사 운동, 동학 농민 운동, 항일 의병 전쟁 등을 전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 협회 활동, 애국 계몽 운동 등을 통하여 근대 국가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제면에서는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근대적 경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근대 의식도 보편화되어 갔다. 또, 과학 기술과 문명 시설이 수용되고, 교육 운동과 국학 운동, 문예 활동과 종교 활동도 근대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전개되어 갔다.<sup>60)</sup>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눈에 띈다. 하나는 조선후기와 개항 이후의 연속성이 이전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동학농민운동 등과 같이 그 때까지는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79년판 교과서에서는

59) 교육부, 1992 《고등학교 국사(하)》 9~10

60) 교육부, 《위 책》 70

부정적으로까지 이해되기 쉬웠던 사건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1979년판 교과서에서 1982년판 교과서로, 그리고 또 1990년판 교과서로의 이와 같은 변화배경에는 교과서의 연구와 집필을 담당한 사람들의 세대교체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79년판 교과서의 경우 그 권말에 표시된 ‘연구진’ 중에서는 고병익, 이광린, 이기백, 전해중, 한우근 등 한국 역사학회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한국사연구 제1세대인 이병도나 제2세대인 신석호의 이름도 볼 수 있다. 그런데 1982년판 교과서에서는 이병도나 신석호와 더불어 이기백과 한우근의 이름도 사라졌다. 그리고 1990년판 교과서에 이르면 그들의 이름은 모두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한국 역사학계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크게 변화되어 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일본의 한국사학계에서는 전혀 상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그 점에 대해 검토해 보자.

## Ⅶ.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한반도의 내재적 발전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일조약에 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의 고양이며 다른 하나는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직결된 아시아 제국과의 연대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움직임은 북한에서의 연구동향과도 상응하여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의 융성을 불러 왔다.

일본의 내재적 발전론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축이 있었다. 하나는 사상면에 있어서 근대의 맹아를 발견하려 한 실학연구, 또 하나는 경제면에 있어서 한반도 자본주의발전의 맹아를 찾고자 한 연구이다. 전자의 대표적 연구자로는 姜在彦을 들 수 있다. 강재연은 북한에서의 연구성과를 솜씨 좋게 흡수해 가며 실학연구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한편 경제면에서 이 시기 연구를 주도한 것은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였다. 가지무라는 그의 주저인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형성과 전개(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展開)》의 글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서는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의 내재적 형성과 전개를 한국근대사 전 과정을 관철하는 한 줄

의 붉은 실(赤い糸)로 삼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오늘날 남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적 논문집이다. 본서는 또한 평면에 일반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특정의 산업부문을 골라 그 안에서 조선 부르주아의 궤적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sup>61)</sup>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강제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한국근대사는 조선사의 한 부분으로서 근대일본의 대조선관계사로 해소되거나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사로 해소될 수 없는 자족적 발전의 역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조선에 대한 올바른 역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민족적 전통에 바탕한 조선인민의 역사적 경영, 그 속에서 역사발전 법칙이 관철되는 역사주체를 안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조선과 일본 및 제열강과의 국제관계를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sup>62)</sup>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70년 말 연구의 전환점이 찾아와 이 시기를 경계로 내재적 발전론이 비약적으로 발전 혹은 확대 해석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강만길의 《한국근대사》가 17세기부터 ‘근대사’라고 쓰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지무라의 저작에서는 제1장을 강화도조약 이후로 구성하였다. 이는 강제언도 마찬가지였다. 강제언도 신용하와 같이 독립협회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의 연구에 중심을 이루는 ‘급진개화파’에 비하면 그 지위는 극히 낮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은 어째서 한국에서와 같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를 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真人)는 그의 논문 <전후 일본에서의 한국 근대사연구의 현 단계(前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研究の現段階)>에서 가지무라의 내재적 발전론의 사상적 후계자인 요시노 마코토(吉野誠)를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시노는 그 당시 幕末로부터 明治期の 일본의 조선관에 대한 몇 가지 조류를 분석하여 그것이 탈아주의나 아시아주의 어느 쪽이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서양문명지상주의, 곧 근대지향주의의 입장에서 있던 점을 비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략) 다만 요시노가 시점의 전환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내재적 발전론’의 원리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요시노의 주장은 ‘내재적 발전론’의 심화·비판이란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로 그것의 전면적 극복을

61) 梶村秀樹, 1977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龍溪書舎) 3

62) 姜在彦, 1970 《朝鮮近代史研究》(日本評論社) i

명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전후역사학’의 일환으로서 ‘내재적 발전론’의 ‘負性’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시아性’을 변혁과 발전의 계기로 파악한 것은 자멸을 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63)</sup>

나미키에 따르면 문제점은 다음 부분에 있었다.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의 특색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논의에 촉발되고, 또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함께 ‘아시아 연대’라는 슬로건으로써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이란 궁극적으로 해당-이 경우 한반도-사회에서의 서양적 근대화의 맹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와의 연대’를 외치고 또 서양 근대와는 구분되는 ‘아시아성’에 착목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더 나아가 두 가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sup>64)</sup> 첫째는 1980년대 NIEs 중 하나로서의 한국경제의 대두이다. 이 새로운 상황은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 두 가지 새로운 조류를 일으켰다. 그 중 하나의 조류의 중심에 선 것은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 등의 그룹<sup>65)</sup>이었다. 나카무라는 한국 경제발전의 기점을 1930년대 식민지공업화로 삼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후에 이 입장은 호리 가즈오(堀和生)<sup>66)</sup> 등의 경제학자에 의해 발전되어 간다.

또 하나의 조류는 미국의 스테판 하가드(Stephan Haggard)의 연구에 자극을 받은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축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하가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본통치기로부터 유래한 한국독특의 금융시스템과 그 결과로서의 ‘강한 국가’, 그리고 그 ‘강한 국가’에 의한 효율적 외자이용에서 찾으려고 하였다.<sup>67)</sup> 한국의 경제성장이 일본 통치기에 연원을 둔 권위주의적 ‘강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는 연구의 진전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이라는 설명 변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오니시 유타카(大西裕)<sup>68)</sup>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sup>69)</sup> 등의

63) 並木真人, 1990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の現段階> 《歴史評論》 6월호, 23

64) 이하의 점에 대해서는 줄고, 2007.11 <‘地域研究’と‘外國研究’としての‘日本における’朝鮮/韓國研究> 《國際協力論集》(神戸大學大學院國際協力研究科) 15-2도 참조할 것.

65)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中村哲, 1988 《朝鮮近代の歴史像》(日本評論社)

66) 대표작으로 堀和生, 1995 《朝鮮工業化の史的 분석》(有斐閣)

67) Stephan Haggard,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68) 예를 들어 大西裕, 1991 <韓國官僚制と經濟成長—輸出工業化の新たな説明> 《法學論叢》 130(1); 1992, 131(4)

69) 예를 들어 木宮正史, 1994 <韓國における内包的工業化戰略の挫折> 《法學志林》 91(3)

정치학자들로 이어졌다.

두 번째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한국사 연구자의 세대교체이다. 일본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자의 세대교체는 통상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우선 한국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빠른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의 수요로 산출된 제1세대 연구자군이 존재했다.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등이 그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조선총독부나 그 외 기관이 소장한 내부 자료를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사이더로서 한국근대사를 동시대사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을 비판하는 형태로 제2세대 연구자가 등장했다. 일본통치기에도 경력이 있던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그 대표주자이며, 가지무라 히데키나 강재언도 이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북한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내재적 발전론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종래의 식민사관의 訂正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2세대 한국 근대사 연구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절대 수가 극히 적어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들의 연구는 대개 이데올로기나 ‘주장’은 명확해도 실증에는 문제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이들은 종래 연구에 대해 실증적 입장에서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이른바 일본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 제3세대의 대두를 《조선사연구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 대표적 인물인 나미키 마사히토 및 호리 가즈오는 1983년에, 하라다 다마키(原田環)는 1984년에 처음으로 그 논문을 게재하였다.<sup>70)</sup>

중요한 것은 같은 시기에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비판이 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의 불철저성에 가해진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한계성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미의 사회과학적 연구나 그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은 오니시 유타카나 기미야 다다시와 같은 제4세대 연구자로 이어졌다. 이 때 ‘내재적 발전론’은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띤 것으로 간단히 잘라버릴 만한 것이 되었다.

사실 필자도 1992년에 공표한 필자 자신의 최초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미숙한 문장이지만 감히 인용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마이너스 요인을 ‘외부’에 설정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70) 朝鮮史研究會, 1994 《朝鮮史研究會論文集: 別冊 [總目次・執筆者索引]》 (綠蔭書房) 15

朝鮮像 또한 극히 비주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실로 ‘내재적’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정체’ 또한 내재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조선에서의 ‘근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71)</sup>

이렇게 1980년대를 큰 경계로 한일 양국은 상이한 韓國近代史像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그로부터 커다란 역사관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음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III. 일본의 교과서로 보는 ‘내재적 발전론’

다음으로 한국 교과서와의 비교를 위해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의 ‘내재적 발전’에 관한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일본의 교과서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아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한다.

아마카와출판사 교과서의 커다란 특색 중 하나는 일본의 주요 역사학회인 ‘史學會’의 편찬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아마카와출판사의 《三訂 日本史》의 표지에는 ‘도쿄대학문학부 내 사학회 호게쓰 게이고(寶月圭吾)편’이라고 되어 있고, 머리말에는 “본서 작성에 대해서는 호게쓰 게이고·후지키 구니히코(藤木邦彦)·도요타 다케시(豊田武)·가사하라 가즈오(笠原一男)·이노우에 미쓰사다(井上光貞) 외 사학회의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었다”고 쓰여 있다.<sup>72)</sup> 이 아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 시리즈는 그 후 《新編日本史》 시리즈로 이어져, 1964년에는 비교적 내용이 충실한 ‘詳說日本史’와 이를 간략화시킨 ‘要說日本史’의 두 개 시리즈로 나뉘어졌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詳說’ 쪽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과서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이 교과서에 관해서는 <표 5>에 나타나듯이 적어도 집필진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사카교육센터에 소장된 교과서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교과서의 ‘저자’는 1973년에 기존의 호게쓰 게이고 및 후지키 구니히코에서 이노우에 미쓰사다·가사하라 가즈오·고

71) 줄저, 2000 《朝鮮/韓國ナショナリズムと<小國>意識》(ミネルヴァ書房) 124. 이 문장이 게재되어 있는 제4장은 1992 <‘儒教的レッセフェール’と朝貢体制> 《法學論叢》 131(6); 1993 《法學論叢》 133(4)를 채수록한 것이다.

72) 史學會 編, 1955 《三訂日本史》(山川出版社) 3

다마 고타(兒玉幸田)로 변경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하라나 이노우에는 이미 1955년 단계부터 사학회편 교과서의 집필에 협력하고 있었다. 그 후 집필자는 완만하게 또 부분적으로밖에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이 교과서시리즈의 집필자에 연속성이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맥적 연속성을 배경으로 하여 일련의 교과서 내용도 시대적으로 매우 연속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련의 교과서들에서 본고에서 착목하고자 하는 내용에서마저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근대’ 시기를 이 교과서들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 변화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대의 공식적 출발점이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이른바 ‘서양의 충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는 1963년의 교과서가 이 새로운 기준점을 채용한 최초의 아미카와출판사 발행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교과서가 에도시대의 산업이나 사상 및 학문의 발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955년의 《三訂 日本史》는 ‘근대공업의 맹아’라는 소제목 하에 일본의 ‘내재적 발전론’에서 주요한 소재 중 하나인 ‘매뉴팩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한편 도이야(間屋: 중개상인·번역자)나 지주 중에는 자신의 집 안에 製絲나 織物 등의 작업장을 두고 그 下人이나 作人으로 하여금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는 미숙하나마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단계에 있던 공장도 있었다. (중략) 물론 이는 본격적인 것은 아니고 아직 부분적인 수준이었으나, 이를 통해서도 막말에 접어들면서 점차 새로운 생산방법이 탄생하게 된 양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sup>73)</sup>

이와 같은 ‘서양의 충격’ 이전의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의 양상은 1970년대가 되면 외관상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73년의 《詳説日本史》에서는 ‘제8장 봉건사회의 동요와 문화의 성숙’이라는 단원 안에 ‘4. 근대로의 태동’이라는 절을 두었다. 이 시기는 교과서의 집필자가 호게쓰 등에서 이노우에 등으로 변화된 시기에 해당하는데, 어찌면 이러한 장 구성의 변화는 새로운 집필진의 의욕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목을 떠나 내용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내재적 발전’에 대해 오히려 보다 엄

73) 史學會 編, 1955 《三訂日本史》(山川出版社) 209

격한 태도를 취해 갔다. 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공업도 발달하여 농민이 부업으로 행하던 가내공업으로부터 상인이 농가에 원료나 도구를 제공하고 제품의 대가로 加工賃을 지불하는 도이야제(問屋制) 가내공업이 확대되었다. 그 중 일부 지주나 도이야상인들은 자본가로서 공장을 설치하고 임노동자를 모아 분업을 통한 공동작업을 행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후기에는 면직물업·견직물업 등에서 이와 같은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쇄국으로 인해 관료가 제한되어 있던 집이나, 幕府나 諸藩의 농민에 대한 통제가 엄격했던 점, 諸藩이 전매제를 시행했던 점 등으로 인해 매뉴팩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sup>74)</sup>

‘4. 근대로의 태동’은 1973년의 교과서에서는 ‘雄藩의 발달’이라는 표제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 1980년의 교과서부터는 기존의 ‘2. 막부의 쇠퇴’와 통합되어 ‘3. 막부의 쇠퇴와 근대로의 태동’으로 수정되었다. ‘근대로의 태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대공업의 맹아’와 ‘정치·사회사상의 발달’이라는 두 개의 소제목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참고로 현재 같은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19세기에 들어 도이야제(問屋制) 가내공업이 한층 발달하고, 일부 지주나 도이야(問屋: 중개상인)는 가내공장을 설치하여 농업에서 유리된 奉公人(임노동자)을 모아 분업과 협업을 통한 수공업적(자본적) 생산을 행하게 되었다. 이를 매뉴팩처(공장제수공업)라고 하며 大坂 주변이나 尾張의 직물업, 桐生·足利 등 北關東의 견직물업 등이 天保期 경부터 행해지기 시작했다.<sup>75)</sup>

교과서의 종류와 책수가 방대한 수에 이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시리즈로 출판되는 교과서의 경우 고도의 집필진의 연속성이 보인다는 점, 둘째 집필진의 연속성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로서 그 내용에서도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발전’론 주장에 대해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그 중요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시기 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

74) 井上光貞·笠原一男·兒玉幸多, 1983 《詳細日本史》(山川出版社) 216

75)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埜利彦, 2006 《詳細日本史》(山川出版社) 212. 흥미롭게도 이 교과서에는 “이미 에도시대 전기의 攝津의 伊丹·池田·灘 등의 주조업에서 매뉴팩처 경영이 보인다”라는 문장을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이 교과서가 무리하게 에도시대 전기에 매뉴팩처가 있었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사이에 교과서 집필진이 대폭 바뀌었고, 그 결과로써 교과서의 내용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내재적 발전’이 중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시기 한국에서 역사연구자의 세대교체라는 상황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한국이 1974년 이후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교과서는 이후에도 일관되게 검정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그로 인해 유일한 존재로 집약되는 국정교과서의 기재내용을 둘러싸고 新·舊 역사학자들 간의 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집필자에 대해 ‘진보’ 및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의 압력이 가해졌다.

그러나 복수의 교과서가 허용된 일본에서는 다른 견해를 지닌 연구자 그룹이 견해를 같이 하는 출판회사와 제휴함으로써 - 검정제의 범위 안이기는 하나 - 공존하는 것이 가능했다.<sup>76)</sup>

바꾸어 말하면 일본에서도 확실히 ‘明治 100년’을 둘러싼 논쟁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일본 근현대사, 혹은 근세사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이러한 대립은 교과서 작성의 현장에 있어서는 특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부딪치기보다 차라리 다른 학파가 다른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각 교과서의 집필진은 안정되었으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대학출신의 사제나 비슷한 전공자,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사이좋은 그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일본에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내재적 발전’에 관한 기술은 - 한국에 비해 - 신중을 기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은 한국과 달리 일본의 ‘내재적 발전’이 검증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곧 웨스턴 임팩트 이후에도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의 범위 안에서나마 독자적 근대화 달성에 실제로 성공한 일본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의 ‘외부로부터

76) 이와 같은 학파별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여기에서 다룬 ‘근대의 맹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다른 교과서들이 모두 ‘근대의 맹아’에 대해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반해, 유일하게 青木美智男·深谷克己·木村茂光·鈴木正幸, 2008 《日本史A》(三省堂) 및 同, 2008 《日本史B》(三省堂) 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근대의 맹아’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민중운동 연구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마르크스주의와 ‘내재적 발전’론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의 충격'이 매우 중요했다는 인식이 상당 정도 공유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교과서가 '단기 네 척의 증기선'을 동원한 페리 내항의 압력으로 서구 열강에 개국한 것과 그 이후의 '문명개화'를 당연시하고 있는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의 교과서에서 근대사는 메이지 이후 서양문명 수용과 그 성공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한일간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한일 간 근대사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일본은 웨스턴 임팩트 이후의 대응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열강의 일원으로 성장하였고, 결국에는 아시아 침략에 착수해 갔다. 그 경로의 좋고 나쁨은 차치해 두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지향하던 바를 달성했다는 목적합리화의 의미에 있어서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로를 거쳐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근대화'에 대해 실제 걸어 온 역사와는 다른 형태의 '가능성'들을 논의하는 데에는 제약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열강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이를 도입하는 형태로 자기 스스로의 변혁을 강제했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도 한정적으로 변화해 갔을 뿐이다.

이에 반해 근대사에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해야 했던 한국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달랐다. 즉 일본에 의해 자력적 '근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은 자신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내재적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도'하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의 '내재적 발전'을 둘러싼 논의는 적어도 그 일부는 '만약 일본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역사상의 'If'와 관련된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실과의 대비 속에 그 서술도 자제될 수밖에 없던 근대 이전의 '내재적 발전'의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으로서 논의될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실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론적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있었을 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한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 IX.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에서의 근대적 법질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째, 198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이 시기 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 그 자체가 매우 상이하게 전개되어 갔다는 점에 있다. 둘째, 그 배경에는 양국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수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 ‘내재적 발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에서는 이 시기 역사연구자들의 세대교체와도 맞물려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역사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내재적 발전론’의 수용이 한정적 수준에 머문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도 커다란 역사관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의 수용형태의 차이는 양국이 걸어 온 근대사의 성격이 달랐던 사실에 유래한다. 즉 자력에 의한 근대화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중단되어 버린 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은 혹 있었을지 모르는 민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의로 수용되었다. 이에 반해 웨스턴 임팩트 이후 실제 ‘성공한’ 근대를 경험한 일본에서의 근대화 도정을 둘러싼 논의는 현실적 경험 앞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양국의 근대와 근대사를 둘러싼 태도의 차이는 현재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양국 교과서에서의 근대적 국제법질서, 특히 이른바 ‘불평등조약’에 관한 서술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는 쪽은 한국의 교과서이다. 이를 다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이 교과서가 근대적 국제법질서와 ‘불평등조약’ 문제를 제국주의나 일본을 비롯한 제 열강의 한반도 침략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일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강화도조약과 이에 부수된 일련의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조약들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었다.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물리지 못하였고, 양국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sup>77)</sup>

77) 김한중 외,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50

일본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교과서 대부분이 강화도조약에서의 ‘불평등성’이 곧 한반도 경제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 교과서에서의 이와 같은 기술은 강화도조약만이 아니라 이 시기 조선왕조가 체결한 대부분의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천재교육의 《한국근현대사》교과서는 ‘04. 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라는 제목의 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국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양 열강과 맺은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은 이후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데 많은 장벽이 되었다.<sup>78)</sup>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전술한 국정교과서 《국사》 이래 이와 같은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판 《국사》 교과서는 강화도조약과 그 부수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이 마련되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곡의 무제한 수출 등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sup>79)</sup>

이러한 기술은 같은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sup>80)</sup> 그리고 이는 이 교과서의 구성상 당연한 결과였다. 애당초 이 교과서 제7장 ‘근대사회로의 진전’의 ‘개요’에서는 “그러나 문호개방은 열강의 침략을 동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결국 이러한 열강들의 침략전쟁의 무대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열강과의 조약체결은 그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교과서에서의 근대적 국제법질서나 ‘불평등조약’에 관한 묘사는 한국의 그것과 매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일본의 교과서가 개항 직후 열강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표적 일본 교과

78) 김홍수·최창희·한시준·박태균·김시어·이진기, 2006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72  
79) 교육부, 1996 《고등학교 국사 하》 75. 번역은 申奎燮·大槻健·君島和彦 譯, 2003 《新版 韓國의 歷史》 (世界の教科書シリーズ 明石書店) 329를 따랐다.

80) 교육부, 1996 《위 책》 104

서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약에서는 ①神奈川·長崎·新潟·兵庫의 개항과 江戸·大坂의 개시, ②자유무역, ③외국인 거류지의 설치와 일반 외국인의 일본국내여행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의 재판을 본국 법에 의해 본국 영사가 행한다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의 경우 일본이 자주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관세자주권이 누락되고 상호 논의를 통해 세율을 결정하는 협정관세제 조항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으로서 明治維新 이후 조약개정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남겼다.<sup>81)</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의 여타 교과서들에서는 불평등조약이 열강의 세력침투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폐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조약개정 교섭으로 연결되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는 ‘불평등조약’ 뿐만 아니라 근대법의 수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전술한 교과서는 “조약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강을 따라 법치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전의 편찬을 서둘렀다”<sup>82)</sup>며 그 수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을 비롯한 제 열강과의 국제조약이 ‘불평등조약’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의 제국주의적 성격이나 그로 인한 부당성을 강조한 데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이를 극복해야 할 질곡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부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위 교과서를 비롯하여 현행 일본의 교과서들은 어느 것도 개항 직후 통상조약의 ‘불평등성’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교과서는 서구 열강에 대한 개항의 경제적 영향을 시장개방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변화나, 金銀比價의 차이로 인한 외국으로의 금화유출을 방지하고자 막부에서 金貨惡鑄를 시행했으나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 열강과 체결한 통상조약의 ‘불평등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본 교과서에서의 ‘불평등조약’ 및 이것이 초래한 사회·경제에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무관심은 역으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체결한 또 다른 ‘불평등조약’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를 예로 들

81) 大津透·久留島典子·藤田覺·伊藤之雄, 2007 《日本史B》(山川出版社) 240~241

82) 《위 책》 271

어 본다면, <표 6>에 나타나듯이 현행 고등학교 일본사B 교과서 11책 중 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임을 본문에 명기한 것은 4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교과서는 본문에 영사재판권 등의 조약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만 있을 뿐 그것이 ‘불평등조약’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것이 1책, 본문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주에서 ‘불평등조약’이라고 명기한 것이 3책, 본문이나 주에서도 ‘불평등조약’임을 명기하지 않고 겨우 주에서 영사재판권 등의 조약 내용만 언급한 것이 2책, 그리고 조약 내용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1책이다. 또한 어느 교과서도 이 조약의 ‘불평등성’이 한반도의 경제나 사회에 초래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에서도 1950년대 전반까지는 ‘불평등조약’의 ‘불평등성’이 야기한 경제 및 사회면에서의 직접적 영향을 서술한 교과서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52년에三省堂에서 간행한 교과서에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는 ‘安政의 5조약’에 대해 “더욱이 일단 무역이 개시되자 구미 자본주의 제국의 근대적 상품은 定率의 관세에 힘입어 조수와 같이 국내에 들어왔다”면서 그 ‘불평등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sup>83)</sup> 그러나 1959년판 같은 교과서에는 이 표현이 “선진 제국의 근대적 상품인 綿絲·織物·武器 등이 조수와 같이 국내에 흘러 들어왔다”고 수정되어 定率關稅와의 인과관계 부분은 삭제되었다.<sup>84)</sup>

이것은 아마도 경제사분야에서의 연구가 진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일본에서도 당초에는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성’과 막말의 경제적 혼란을 연관된 것으로 상정했었다. 그러나 연구의 진전으로 그 인과관계를 논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조약의 ‘불평등성’이 초래한 임팩트보다도 무역 그 자체의 확대가 초래한 임팩트가 훨씬 컸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막말의 경제적 혼란을 조약의 ‘불평등성’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교과서에서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1955년의 史學會 編, 《三訂日本史》에서는 강화도조약과 그것이 초래한 영향에 대해 “불평등조약에 의해 보장된 유리한 조건 하에 일본산 면제품이 조선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조선무역은 날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 측 관점에서 ‘불평등조약’의 효과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sup>85)</sup> 그러나 이 부분은

83) 家永三郎, 1952 《新日本史》(三省堂) 177

84) 家永三郎, 1959 《新日本史 三訂版》(三省堂)

85) 史學會 編, 1955 《三訂日本史》(山川出版社) 267

이듬해 같은 야마카와 출판사에서 출판한 《新修日本史》에서는 삭제되었다.<sup>86)</sup>

어쨌든 일본 교과서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근대적 법질서나 ‘불평등조약’에 대한 태도는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일관되어 왔다. 대다수 교과서에서 일찍부터 구미 열강과의 통상조약을 통한 ‘개국’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서술해 온 반면, ‘불평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은 채 그것이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였다는 점만 서술되고 있다. 때문에 강화도조약에 대해서도 그것이 ‘불평등조약’이었음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치고, 한반도의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의 ‘불평등조약’을 둘러싼 기술의 차이까지를 시야에 넣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한일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차이와 그를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근대’ 경험의 차이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웨스턴 임팩트 이후 자력적 근대화에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에 있어서 ‘근대’란 스스로를 그에 맞춰 적응시켜야 했던 기준인 동시에, 또 스스로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게 한 것이기도 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교과서에 묘사된 ‘근대’의 모습은 선명하게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내재적 발전론’이 그려낸 근대화의 맹이는 자력으로 실현했을지 모를 근대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는 한편, ‘불평등조약’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법질서는 근대의 그림자 부분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였다.

이에 반해 웨스턴 임팩트 이후 스스로를 근대 사회에 적응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적어도 어느 단계까지는 이에 ‘성공’한 일본에게 ‘근대’란 우선 극복해야 할 목표였으며, 또 그 이상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극복해 온 ‘현실’이기도 했다.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서의 ‘근대’에 관한 기술 역시 그와 같은 일본의 현실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에 보이는 역사적 ‘If’에 관한 부분이나 ‘불평등조약’ 배후에 존재하는 열강의 사악한 의사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여러 장

86) 寶月圭吾 編, 1956 《新修日本史》(山川出版社)

애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이며, 따라서 ‘불평등조약’도 그 내용이나 영향은 주목되지 않고 그 해소를 위해 과거 사람들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는가가 강조된다.

본고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근대’에 있어서의 한일 간 역사적 경험의 차이로 말미암은 역사관의 차이가 1980년대 이후 확대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 일찍이 1970년대 이전의 한일 양국은 이러한 ‘근대’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유사한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 시기까지 한국의 역사학자 대다수가 일본통치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사관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스스로의 ‘근대사’도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세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점차 사라졌고, 결국에 한국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욕구에 합치되는 형태로 역사관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일 양국은 상이한 역사인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일 양국이 오늘날까지 걸어 온 도정과 그 결과로서의 상이한 역사인식은 양국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양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함께 남겨놓은 일본적 역사인식은 상이한 역사를 경험한 한국에는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역으로 한국적 역사인식이 상이한 역사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근대’의 자신의 ‘현실’적 경험을 성공으로서 인식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근대’의 다양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또 그 ‘빛’과 더불어 ‘그림자’ 부분을 강조하는 한국의 역사인식은 스스로가 걸어 온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그다지 유효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다. 결국 역사인식이란 각각의 국민이나 개인이 걸어 온 과거의 경험에 합치되는 형태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역사관을 다른 한편에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양국 사이에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일 양국이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화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상이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예는 무수히 존재한다. 공통의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는 사회보다 복수의 역사인식의 공존을 인정하는 사회가 훨씬 자유롭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표 1〉 朝日新聞의 기사 증감

	한국	북한	동경재판	야스쿠니	전범	전쟁범죄	전쟁책임
1945-49	299	1123	1005	65	418	1265	1122
1950-54	2998	8444	5	37	737	227	800
1955-59	2203	1909	0	42	329	1	361
1960-64	4944	1011	2	25	57	0	16
1965-69	3687	1925	3	81	58	19	1
1970-74	4791	2351	0	156	33	10	23
1975-79	5588	1917	6	94	79	3	10
1980-84	4669	1692	16	241	66	0	17
.	.	.	.	.	.	.	.
1985-89	14799	7376	124	1481	548	137	824
1990-94	23039	17441	136	597	513	236	1347
1995-99	30224	18804	202	754	778	572	949
2000-04	39450	28179	174	3282	1192	463	592
2005-06.6	11615	6544	133	2571	569	129	221

※註: <https://database.asahi.com> (최종확인 2006년 12월 7일) 1984년 이전은 데이터베이스의 분류키워드 및 기사제목에 표 상단의 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 수를, 1985년 이후는 기사제목 혹은 본문에 각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수를 표시함.

〈표 2〉 東京書籍 기술의 증감표

高校 東京書籍	1978	1983	1990	1993	1996	2000	2004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	△	△	△	△	○	○
제2차 한일협약		△	○	○	○	△	○
제3차 한일협약			△		△		
헤이그 밀사사건		△	△	△	△	△	○
한국통감부	△	○	○	○	○	○	○
안중근							○
한일병합조약	○	○	○	○	○	○	○
조선총독부		○	○	○	○	○	○
토지조사사업		△	△	△	△	△	○
3· 1독립운동	△	△	○	○	△	○	○
만세사건		○	○	△	△	△	△
황민화			△	△	△	△	○
창씨개명			△	△	△	△	○
의병운동(투쟁)			△	△	△	○	○
관동대지진						○	
중군위안부(위안부)						△	○
강제연행							○
자료(한일의정서) 본문	○						
사진 伊藤博文과 韓國皇太子	○						
사진 3· 1독립운동							○
사진 宮城遙拜하는 조선의 사람들							○
사진 의병						○	○

○는 굵은문자로 된 기술, △는 보통문자로 된 기술

자료 등에 대해서는 기재가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鄭奈美·木村幹, 2008.11 <‘歷史認識’問題と第一次日韓歷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二)> 《國際協力論集》 16(2), 137. 표 작성자는 鄭奈美.

〈표 3〉

	중요성 없음	중요성 있음
이해 차이 없음	논쟁 부재	‘공통의 인식’
이해 차이 있음	일어나지 않은 논쟁	‘인식’을 둘러싼 논쟁

〈표 4〉 韓國 歷史學會 會長/代表幹事

이름	취임	이름	취임
홍이섭	1952	이재룡	1985
★고병익	1957	황원구	1987
★전해중	1960	최문형	1989
★김원룡	1962	유영익	1990
★한우근	1963	한영국	1993
★이보형	1967	김영한	1994
☆이기백	1967	민현구	1996
이우성	1971	김용덕	1999
☆길현모	1972	이주영	2001
☆이기백	1974	이태진	2002
☆이광린	1976	김두진	2005
차하순	1983		

※주: 한국 역사학회 홈페이지 (최종확인 2008년 12월 18일)

★은 한국 역사학회 창설멤버, ☆은 1960년대 이전에 추가된 상임간사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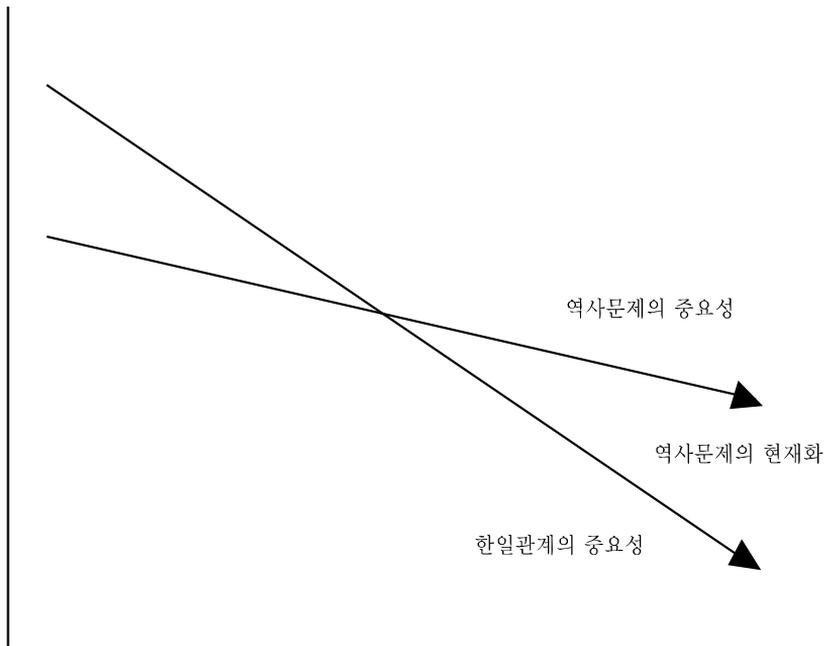
〈표 5〉 史學會 系 야마카와(山川)출판사 저자의 변화

년	저자 1	저자 2	저자 3	저자 4	‘매뉴팩처’가 기술되어 있는 부분		
1964	寶月圭吾	藤本邦彦			제7장	봉건문화의 동요	
1967	寶月圭吾	藤本邦彦			제7장	봉건문화의 동요	
1970	寶月圭吾	藤本邦彦			제7장	봉건문화의 동요	
1973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봉건사회의 동요와 문화의 성숙	4 근대로의 태동
1977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봉건사회의 동요와 문화의 성숙	4 근대로의 태동
1980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봉건사회의 동요와 문화의 성숙	4 근대로의 태동
1982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3 막부의 쇠퇴와 근대로의 태동
1987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1990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3 막부의 쇠퇴와 근대로의 태동
1991	井上光貞	笠原一男	兒玉幸多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1994	石井進	笠原一男	兒玉幸多	笹山晴生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1997	石井進	笠原一男	兒玉幸多	笹山晴生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2002	石井進	五味文彦	笹山晴生	高埜利彦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2006	石井進	五味文彦	笹山晴生	高埜利彦	제8장	막번체제의 동요	

〈표 6〉 강화도조약에 관한 현행 일본 교과서(일본사 B)의 기술

집필자	교과서명	출판연도	출판사	강화도조약에 관한 기술	비고
朝比奈正幸 외	最新日本史	2002	明成社	註	‘불평등조약’이라는 명기 없음
宮地正人 외	新日本史B	2003	桐原書店	註	‘불평등조약’이라는 명기 없음
尾藤正英 외	新選日本史B	2003	東京書籍	본문	
山本博文 외	日本史B	2003	東京書籍	본문	
石井進 외	改訂版 詳説日本史	2006	山川出版社	註	
青木美智男 외	日本史B 改訂版	2007	三省堂	註	
脇田修 외	日本史B 新訂版	2007	實教出版	註	
加藤友康 외	高等學校日本史B 改訂版	2007	清水書院	본문	
宮原武夫 외	高校日本史B 新訂版	2007	實教出版	본문	‘불평등조약’이라는 명기 없음
大津透 외	改訂版 新日本史B	2007	山川出版社	본문	
石井進 외	高校日本史 改訂版	2007	山川出版社	無	

[그림 1]



[비평문]

김도형

1. 논문의 내용

기무라 교수는 한일 간 역사 분쟁이 근대를 보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차이가 한일 양국 교과서의 근대 법질서(불평등조약) 서술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무라 교수는 신문 기사(朝日新聞, 朝鮮日報)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역사 인식을 둘러싼 분쟁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무라 교수는 흔히 한일 간 역사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①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다양한 역사인식의 등장, ②‘일본의 우경화’ 현상 등만으로는 분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원인은 한일 양국 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수용 차이에 있고, 그 수용 형태의 차이는 양국이 걸어온 근대의 성격이 달랐던 점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즉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이 혹 있었을지 모르는 민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의로 수용되었다면, 일본에서는 ‘성공한’ 근대를 경험하면서 이를 신중하게 다루었는데, 이런 역사학 연구의 차이에서 분쟁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무라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한일 역사교과서의 서술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 전형적인 예가 양국 교과서에 기술된 근대법 질서, 특히 ‘불평등조약’에 관한 서술이라고 하였다.<sup>1)</sup> 한국에서는 불평등조약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면, 일본에서는 불평등조약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근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위에서 기무라 교수는 결론적으로 양국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한 역사인식을 만들었고, 어느 한편의 역사관을 다른 한편에 강요하면 ‘쓸데없는 분쟁’이

1) 기무라 교수의 논문은 한일 간 역사 분쟁을 일으킨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다룬 것이다. 논문의 일부분으로 불평등조약 서술을 다룬 것은 물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동연구 주제로 합의한 ‘근대법 질서와 국가’에 맞추기 위해 이 부분을 ‘사족’처럼 서술했다는 느낌이 있다.

일어나기 때문에 “공통의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는 사회보다 복수의 역사 인식의 공존을 인정하는 사회가 훨씬 자유롭고 매력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 2.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해 문제

해방 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제기된 ‘내재적 발전론’은 일본인이 식민 지배를 위해 만든 식민사관, 곧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논리이다. 1960년대 이후, 특히 조선 후기 사회의 농업, 상업, 수공업, 사상 등에서의 변화를 규명하고, 이를 근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요소(이른바 “자본주의맹아”)가 나타났다고 파악하면서 정립되었다. 이런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을 비판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것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단순한 ‘민족’ 우선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나온 것이었다. 처음 이 용어로 한국사의 동향을 분석했던 일본학계에서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하였다.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 현상과 결합되어 민족주의가 왜곡되고 역사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흔히 이런 경향이 한국의 ‘내재적 발전론’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재적 발전론에는 경향을 달리하는 여러 입장들이 분별되지 않은 채 매몰되어 있었다. 국수주의적 경향도 그 속에 있었고, 또한 한국사회의 과제였던 민주화, 통일 등의 지향하는 역사 경향도, 심지어 1980년대 이후 제기된 이른바 ‘민중사학’도 모두 내재적 발전론과 결합되어 있다. 기무라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의 흐름 속에 담긴 역사적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무라 교수가 동일한 범주로 본 강만길과 신용하의 역사연구 태도를 매우 다르게 보고 있는 한국학계의 평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역사 인식과 역사 분쟁의 원인

기무라 교수는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의 원인은 한일 양국이 가졌던 상이한 ‘근대’에 대한 인식, 특히 한국 역사학계의 근대에 대한 집착으로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이 달라지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 역사 인식의 차이와 분쟁의 근저에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근대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양국의 역사 인식이 달라졌다고 분석한 기무라 교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한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근대사회를 만들어갔고, 따라서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적 투쟁 활동이 한국 근대사의 기본 성격이 되었다. 자연히 민족, 민족주의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런 점에서 역사인식의 차이, 역사 분쟁이 야기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한일 간 역사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역사 분쟁의 원인이 왜 일어났으며, 또 그 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결론이다. 오늘날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은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 전쟁,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이를 미화하려는 역사 인식 때문에 역사 분쟁, ‘교과서 과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우익적, 보수적 역사 인식에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학계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해, 역사 인식의 차이가 교과서 서술된 예로 기무라 교수는 강화도 조약의 성격(불평등 조약)을 들고 있다. 조선이나 일본이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맺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조선에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시도는 일본의 힘에 의해 좌절되었다. 불평등조약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일본은 왜 힘을 기울여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고, 일본의 교과서에 이를 매우 의미있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조선과 수호조규를 맺으면서 무력을 앞세워 왜 이를 강요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침략했는지를 알 수 없다. 지금 사용 중인 일본의 몇몇 역사교과서에서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을 강조한 것을 오히려 의미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4. 나머지 말

한일 간에 역사인식의 차이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 하던 시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일제의 식민사학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학자의 반식민사학(민족사학, 사회경제사학)이 제기되었다. 이런 역사인식의 차이는 해방 이후에도 잠복되어 있었고, 일본이 여전히 전날의 식민사학과 같은 맥락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면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기무라 교수가 얘기하듯이, “현재의 중요성이 약화되면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부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중요성, 아니 미래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현재와 미래의 출발이 되는 과거를 정리하려는 의식이 더 높아진다. 역사는 언제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역사가 단순하게 과거의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철저한 자민족 중심주의가 가지는 폐단(제국주의, 식민주의)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민족 역사가 단순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민족, 국가와의 교류, 통교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조화롭게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를 주체 세력의 활동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이 활동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간에 역사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풀고 역사인식을 접근시켜야 양국의 미래를 평화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 한일 간에 교류가 증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역사 문제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역사인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인정하고 덮어 놓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더 단단한 미래 관계를 위하여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평자는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집필자 답변]

우선 줄고에 대한 정중한 해설과 비평에 감사드리고 싶다. 비평에 대한 반론의 의미는 아니지만 아래의 점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다.

첫째로, 본 논문은 비평문에서 지적하듯이, 한일의 역사 문제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격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본 논문이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서의 근대 국제법 및 근대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의 전제가 된 것은 아래와 같은 생각이다. 우선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 근대 국제법과 근대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이 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서 이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자료 정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서술의 차이가 생겼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또 이 서술의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밝힘으로써 한일 사이에 여전히 가로놓여 있는 역사 인식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근대 국제법 질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의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한 연구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성을 취함으로써 한일 양국간 교과서 분석 방법이 새롭게 주목을 불러일으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은 이러한 본 논문의 목적과 구성을 이해하기 바란다.

둘째로,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 학계 내부에 있어 연구자의 평가 문제이다. 물론 필자도 한국 국내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본 논문에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연구자 중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서로 다른 연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그러한 한국 학계에서의 이해와 연구자의 분류 그 자체가 아니라 보다 큰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구자의 역사관의 어느 지점에 커다란 시대적 단절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대적 단절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 필자는 한일 양국간에 어떠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한 역사 인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한일 양국에서 역사 인식의 접합이 필요하다

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이는 한일 간의 무언가의 ‘공동연구’가 양자의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참으로 학술적인 ‘공동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것이며 또 학문적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